

# HRI 한반도 평화지수 : 2012년 1/4분기 큰 폭 하락

홍순직·이용화 /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

## □ 남북 관계 현안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 72명과 일반국민 1,002명에 대한 설문조사(1. 31~2. 10) 결과,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향후 김정은 체제는 경제난 해결을 통한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개혁·개방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없더라도 전향적인 남북관계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현 정부 임기 내에 가장 시급한 해결 사안으로는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와 이산가족 상봉, 남북경협 회복 등 실현 가능성이 높은 비정치·군사 분야의 협력을 꼽았다. 다만 대북 신뢰도, 남북관계 및 통일에의 영향 등에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정치 성향 등에 따라 시각차를 보였다.

한편, 전문가의 대부분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잘못한다고 평가하면서, 응답자 모두가 차기 정부는 기존의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되거나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차기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을 파트너로서의 인정과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정경분리 원칙 등으로 남북 상호신뢰 회복 노력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 □ 2012년 1/4분기 HRI 한반도 평화지수 전망 결과

2011년 4분기 HRI 한반도 평화지수와 2012년 1분기 기대지수는 하락세로 반전하여 지난 분기에 비해 각각 2.5p, 10.3p 하락하였다. 이는 천안함·연평도 문제 미해결의 장기화와 6자회담 재개 지연, 김 위원장 사망 후의 남북관계 긴장 고조 등에 기인한다. 2011년 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와 2012년 1분기 기대지수를 조사한 결과, 다음 3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실적에 기초한 객관적 지표인 정량분석지수는 소폭 상승했지만, 주관적 지수인 전문가 평가지수와 2012년 1분기 기대지수는 대폭 하락하였다. 둘째, 항목별로는 전문가평가 지수가 '협력·대립의 공존상태'의 진입 단계에서 '긴장 고조' 상태로 대폭 하락하였지만, 실적에 기초한 정량분석지수는 소폭 상승하였다. 셋째, 성향별 평가에 있어서는 성향 구분 없이 모든 전문가들이 지난 분기보다 남북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 남북 관계 현안 설문조사 결과

김정은 체제의 개혁·개방 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현 수준’과 ‘점차 확대’에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이는 심각한 경제난이 민심 동요 등의 체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개혁·개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보수성향의 전문가들(56.5%)과 일반인들(43.0%)은 ‘현재 수준 유지’를, 진보성향의 전문가들(69.6%)과 일반인들(47.7%)은 ‘점차 확대’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김정은 체제의 개혁·개방	전문가				일반인			
	종합	보수	중도	진보	종합	보수	중도	진보
점차 확대할 것이다	56.9%	39.1%	61.5%	69.6%	39.2%	34.7%	36.7%	47.7%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40.3%	56.5%	34.6%	30.4%	41.1%	43.0%	44.6%	34.9%
오히려 축소할 것이다	2.8%	4.3%	3.8%	0.0%	19.8%	22.4%	18.7%	17.4%

대북신뢰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응답률은 ‘신뢰할 수 있다’(37.5%)와 ‘신뢰할 수 없다’(40.3%)가 큰 차이 없는 반면, 일반인들은 전반적으로 북한을 대화 파트너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 비율(69.4%)이 높았다. 전문가의 경우에는 정치성향 별로 응답률이 달랐는데, 보수성향(65.2%)은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한 데 반해, 진보성향(69.6%)은 신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반면 일반인의 경우는 성향 구분 없이 상당수가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여전히 천안함·연평도 사건, 남한의 회담 제안 거부 등이 응답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에 대한 신뢰도	전문가				일반인			
	종합	보수	중도	진보	종합	보수	중도	진보
신뢰할 수 있다	37.5%	8.7%	34.6%	69.6%	19.9%	11.3%	21.2%	29.9%
신뢰할 수 없다	40.3%	65.2%	38.5%	17.4%	69.4%	80.4%	63.1%	61.1%
잘 모르겠다	22.2%	26.1%	26.9%	13.0%	10.8%	8.3%	15.7%	9.1%

## HRI 한반도 평화 지수

천안함·연평도 사과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대다수(75.0%)와 일반인의 과반수(51.6%)가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없더라도 정부는 북한의 새지도부와 전향적으로 관계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전향적인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줌으로써, 작금의 전환기를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와 새로운 남북 관계 형성의 기회(opportunity)로 활용하자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성향별로는 일반인의 보수 성향(55.9%)을 제외하고 대다수가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가 없더라도 전향적으로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천안함·연평도 사과 문제	전문가				일반인			
	종합	보수	중도	진보	종합	보수	중도	진보
사과 없이 대화해서는 안 된다	25.0%	47.8%	11.5%	17.4%	45.0%	55.9%	43.5%	31.9%
사과 없어도 전향적으로 관계 개선	75.0%	52.2%	88.5%	82.6%	51.6%	41.8%	51.0%	65.4%

김정은 체제 출범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인들 간의 시각차가 존재하였다. 전문가의 72.2%는 김정은 체제 등장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지만, 상당수의 일반인들(60.8%)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응답하였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성향 구분 없이 모두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는 응답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	전문가				일반인			
	종합	보수	중도	진보	종합	보수	중도	진보
도움이 될 것이다	72.2%	65.2%	76.9%	73.9%	39.2%	31.3%	38.2%	51.0%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27.8%	34.8%	23.1%	26.1%	60.8%	68.7%	61.8%	49.0%

2012년 남북 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현재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자 비율이 높았다. 특히 상당수의 전문가(69.4%)와 일반인(66.7%)은 김정은 체제가 등장하더라도 당분간 남북 관계에는 ‘별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김 위원장 사망 이후 남한의 조문 제한 등으로 남북 관계가 여전히 경색돼 있으며, 특히 현 정부와는 일절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북한 국방위원회의 발언 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은 체제와 남북 관계 전망	전문가				일반인			
	종합	보수	중도	진보	종합	보수	중도	진보
좋아질 것이다	19.4%	21.7%	15.4%	21.7%	23.3%	20.8%	21.3%	28.6%
별 변화가 없을 것이다	69.4%	65.2%	76.9%	65.2%	66.7%	70.1%	66.9%	62.0%
나빠질 것이다	11.1%	13.0%	7.7%	13.0%	10.0%	9.1%	11.8%	9.5%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 평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68.1%와 일반인의 48.5%가 통일에 가장 도움을 줄 나라로는 미국이라고 응답했고, 방해할 나라는 전문가의 69.0%와 일반인의 67.6%가 중국이라고 응답하였다. 중국이 통일을 방해할 나라로 응답된 것은 최근의 북중 경제 밀착과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등으로 양측 간의 정치·경제 관계가 밀착될수록 남한의 대북 지렛대 역할과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효과가 약화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주변국 평가		전문가	일반인
통일에 가장 도움을 줄 나라	미국	68.1%	48.5%
	중국	18.8%	29.2%
	일본	1.4%	4.0%
	러시아	11.6%	3.1%
통일에 가장 방해할 나라	미국	11.3%	16.4%
	중국	69.0%	67.6%
	일본	19.7%	11.6%
	러시아	0.0%	4.4%

김정은 체제의 대외관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상당수가 북미관계(51.4%), 북중관계(68.1%) 모두 현재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응답하여, 김정은 체제의 대외관계는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북중관계는 정치성향에 관계없이 모두 현재보다 개선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북미관계는 진보성향의 전문가들만 현재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65.2%)이 높았다.

## HRI 한반도 평화 지수

북한의 대외관계		전문가			
		종합	보수	중도	진보
북미 관계	현재보다 개선될 것이다	51.4%	43.5%	46.2%	65.2%
	현재 수준일 것이다	48.6%	56.5%	53.8%	34.8%
	현재보다 악화될 것이다	0.0%	0.0%	0.0%	0.0%
북중 관계	현재보다 개선될 것이다	68.1%	73.9%	69.2%	60.9%
	현재 수준일 것이다	30.6%	26.1%	30.8%	34.8%
	현재보다 악화될 것이다	1.4%	0.0%	0.0%	4.3%

2012년 북한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70.8%가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해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다. 이를 반영하듯 북한은 2012년 신년공동사설에서 강성대국의 구호를 줄이고 강성국가(10회), 강성부흥(11회)이란 구호로 하향 조정하였다. 다만, 악화보다는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다소 많았다.

2012년 김정은 체제의 북한경제 전망	종합
작년보다 좋아질 것이다	18.1%
작년과 비슷할 것이다	70.8%
작년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11.1%

현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대다수(79.2%)가 잘못하다는 평가로 응답했고, 정부의 지나친 원칙 강조로 인한 남북경색을 실정(失政)으로 지적했다. 특히 지난 3분기와 비교해도 잘못했다는 응답 비율이 증가(73.8% → 79.2%)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보수성향(52.2%)은 '잘하는 편이다'의 응답 비율이 비교적 높았지만, 중도 및 진보성향은 절대다수가 '잘못한다'고 하여 정치성향별 차이가 분명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2011.11	2012.2			
		종합	보수	중도	진보
아주 잘 한다	1.2%	0.0%	0.0%	0.0%	0.0%
잘하는 편이다	25.0%	20.8%	52.2%	3.8%	8.7%
잘못하는 편이다	35.0%	41.7%	34.8%	61.5%	26.1%
아주 잘 못한다	38.8%	37.5%	13.0%	34.6%	65.2%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잘했다’고 응답한 전문가(20.8%)에 한해 질문한 결과, 잘한 점은 대다수가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이라고 응답(80.0%)했고, 다음으로 ‘통일세 신설 추진 등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 확대’ (13.3%)를 성과로 지적하였다. 그러나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인권 및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무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 잘한 점	종합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80.0%
통일세 신설 추진 등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 확대	13.3%
한미동맹 강화	0.0%
북한인권 및 탈북자 지원 대책 강화	0.0%
남북관계 비전 제시	0.0%
기타	6.7%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잘못했다’고 응답자(79.2%)에 한해 질문한 결과, 잘못된 점은 대다수가 ‘원칙강조로 인한 남북경색 지속’ (78.9%)이라 응답했고, 다음으로 ‘주변국과의 공조 미흡 및 북한의 대중의존도 심화’ (8.8%)의 순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통일에 대한 관심 부족, 현실성 없는 북한 붕괴 추구로 남북간 불신 심화, 분명한 원칙 미 고수 등이 있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 잘못된 점	종합
원칙강조로 인한 남북경색 지속	78.9%
주변국과의 공조 미흡과 북한의 대중의존도 심화	8.8%
통일세 제안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의 심리적 부담	0.0%
북한인권 실질적 개선 미흡	0.0%
보수와 진보간의 여론 결집 미흡으로 남남갈등 심화	7.0%
기타	5.3%

현 정부 임기 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북한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와 이산가족 상봉, 남북경협 회복 등 실현가능성이 높은 비정치·군사 분야의 협력을 우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 HRI 한반도 평화 지수

현 정부 임기 내 시급한 해결 사안	시급하다	시급하지 않다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식량, 의약품 등)	81.9%	18.1%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	81.9%	18.1%
남북간 신뢰회복을 위한 중단된 남북경협 회복	77.8%	22.2%
천안함·연평도 문제 매듭 짓기	65.7%	34.3%
개성공단 사업 활성화 (2단계 사업)	63.4%	36.6%
주변 강대국들과의 공조 하에 북한 비핵화	63.4%	36.6%
금강산·개성 관광사업 재개	62.5%	37.5%
북한 지하자원 개발 및 대북 투자 활성화	42.3%	57.7%
북한 인권 개선 방안 마련	42.3%	57.7%
남북 고위급 회담 및 정상회담 개최 추진	29.6%	70.4%

정치·외교 분야에서는 국내적으로는 ‘천안함·연평도 문제 매듭짓기’ (65.7%)를, 대외적으로는 ‘주변 강대국과의 공조 하에 북한 비핵화’ (63.4%)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응답률(29.6%)이 낮게 나타난 것은 최근의 남북간 긴장 고조 움직임으로 전문가들은 현 정부 임기 내에 실현 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주변 강대국과의 공조 하에 북한 비핵화’에 대해 대다수의 보수성향(82.6%)은 ‘시급하다’로 응답한 반면, 과반수의 진보성향(54.5%)은 ‘시급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성향별로 시각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정부 임기 내 시급한 해결 과제			전문가			
			종합	보수	중도	진보
정치	천안함·연평도 문제 매듭짓기	시급하다	65.7%	69.6%	60.0%	68.2%
		시급하지 않다	34.3%	30.4%	40.0%	31.8%
외교 분야	주변국과의 공조 하에 북한 비핵화	시급하다	63.4%	82.6%	61.5%	45.5%
		시급하지 않다	36.6%	17.4%	38.5%	54.5%
	남북 고위급 회담 및 정상회담 추진	시급하다	29.6%	21.7%	26.9%	40.9%
		시급하지 않다	70.4%	78.3%	73.1%	59.1%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및 ‘이산가족상봉 문제해결’에 대해 정치성향에 관계없이 모두 높은 비율로 시급하다고 응답되었다. 하지만 북한 인권 개선 문제는 시급성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뒤떨어지게 응답되었다.

현정부 임기 내 시급한 해결 과제			전문가			
			종합	보수	중도	진보
사회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식량, 의약품 등)	시급하다	81.9%	60.9%	88.5%	95.7%
		시급하지 않다	18.1%	39.1%	11.5%	4.3%
문화 분야	이산가족상봉 문제해결	시급하다	81.9%	69.6%	84.6%	91.3%
		시급하지 않다	18.1%	30.4%	15.4%	8.7%
	북한 인권 개선 방안 마련	시급하다	42.3%	65.2%	30.8%	31.8%
		시급하지 않다	57.7%	34.8%	69.2%	68.2%

경제 분야에서는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중단된 남북경협 회복’(77.8%)과 개성공단 활성화(63.4%), 금강산·개성관광 재개(62.5%)가 시급하다고 응답하였다. ‘금강산, 개성 관광의 재개’가 시급하다는 응답자 비율은 종합적(62.5%)으로는 높지만, 성향별로는 보수성향의 다수(69.6%)가 시급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중도·진보성향과 차이를 보였다.

현정부 임기 내 시급한 해결 과제			전문가			
			종합	보수	중도	진보
경제 분야	남북 간 신뢰회복을 위한 중단된 남북경협 회복	시급하다	77.8%	60.9%	84.6%	87.0%
		시급하지 않다	22.2%	39.1%	15.4%	13.0%
	개성공단 사업 활성화 (2단계 사업)	시급하다	63.4%	56.5%	65.4%	68.2%
		시급하지 않다	36.6%	43.5%	34.6%	31.8%
	금강산·개성 관광사업 재개	시급하다	62.5%	30.4%	73.1%	82.6%
		시급하지 않다	37.5%	69.6%	26.9%	17.4%
	북한 지하자원 개발 및 대북투자 활성화	시급하다	42.3%	30.4%	46.2%	50.0%
		시급하지 않다	57.7%	69.6%	53.8%	50.0%



## HRI 한반도 평화 지수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모든 전문가들이 차기 정부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전문가들의 58.3%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보수 성향마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계승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전무했다. 성향별로는 진보(87.0%)와 중도(61.5%)의 경우는 '전면 재검토'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보수성향의 전문가마저도 상당수(73.9%)가 기본틀은 유지하되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전문가			
	종합	보수	중도	진보
전면 재검토	58.3%	26.1%	61.5%	87.0%
기본틀은 유지하되 수정, 보완	41.7%	73.9%	38.5%	13.0%
현 정부의 대북정책 계승	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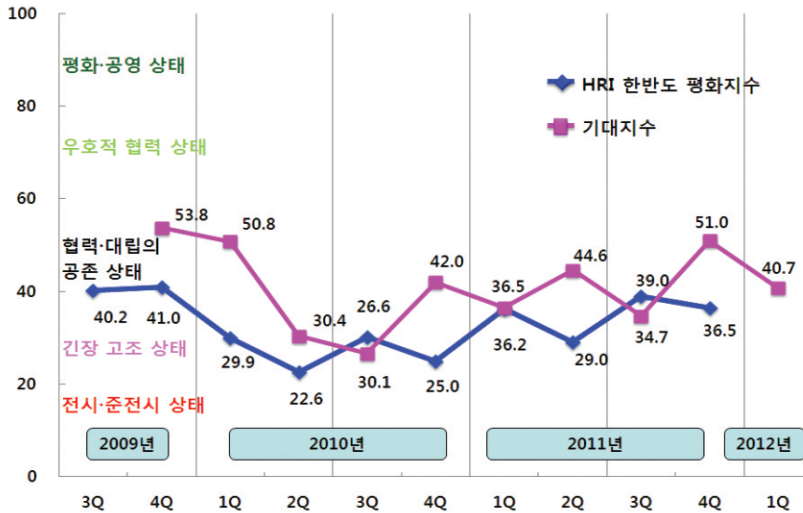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역점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34.7%가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중 '파트너 인정과 인도적 지원 확대 등으로 남북한 상호신뢰 회복 노력'을 가장 중요한 역점 분야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정경분리 원칙으로 남북경협 활성화'와 '주변국과의 균형외교 강화로 한반도 안정적 관리'가 각각 19.4%로 중요하다고 응답되었다. 성향별로는 보수성향이 '주변국과의 균형외교 강화'에 높은 응답률(34.8%)을 보였지만, 중도와 진보성향은 '남북한 상호신뢰 회복 노력'과 '남북경협 활성화'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역점 분야	전문가			
	종합	보수	중도	진보
파트너 인정과 인도적 지원 확대 등으로 남북 상호신뢰 회복 노력	34.7%	21.7%	34.6%	47.8%
정경분리 원칙으로 남북경협 활성화	19.4%	13.0%	23.1%	21.7%
주변국과의 균형외교 강화로 한반도 안정적 관리	19.4%	34.8%	15.4%	8.7%
한반도의 평화협정 체결 (군사적 긴장 완화)	9.7%	0.0%	11.5%	17.4%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대와 통일재원 확충	6.9%	13.0%	3.8%	4.3%
대북압박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 촉구	5.6%	8.7%	7.7%	0.0%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인권 개선 등	4.2%	8.7%	3.8%	0.0%

## 2012년 1/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전망 결과

2011년 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천안함·연평도 문제의 미해결 장기화 등으로 하락세로 반전하였다. 3분기 39.0을 기록했던 한반도 평화지수는 전기 대비 2.5p 하락한 36.5를 나타냄으로써 한반도의 긴장 고조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2년 1분기 기대지수도 김 위원장 사망 후의 남북관계 긴장 고조 등으로 지난 분기 상승세에서 10.3p 대폭 하락하면서 전문가들의 남북 관계에 대한 전망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분기 기대지수는 40.7로 나타나, 2011년 4분기의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에서 ‘긴장 고조’ 상태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2009~2011 HRI 한반도 평화지수의 추이〉



### 특징 분석

실적에 기초한 객관적 지표인 정량분석지수는 소폭 상승했지만, 주관적 지수인 전문가 평가지수와 2012년 1분기 기대지수는 대폭 하락하였다. 4분기 전문가평가 지수는 31.9로 3분기 40.0에서 8.1p 대폭 하락 반전하였으나, 정량분석지수는

41.1을 기록하여 전 분기 대비 3.1p 소폭 상승하였다. 전문가 평가지수의 큰 폭 하락은 천안함·연평도 문제 미해결 여파의 장기화와 6자회담 재개 불투명, 연평도 사건 1주기 훈련으로 인한 북한의 위협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전문가들의 기대지수도 지난 분기에 비해 대폭 하락하여 남북관계 불안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북미·북일 접촉 속에서도 북한이 정부의 김 위원장 조문 불허를 거세게 비난하면서, 현 정부와는 상종하지 않겠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 간 격차는 여전하여, 전문가들이 현 상황을 실제로 다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평가인 전문가평가지수와 객관적 평가인 실적치로 보는 정량분석지수 간의 격차( | 전문가평가지수 - 정량분석지수 | )는 9.2로, 지난 분기 2.0에 비해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는 전문가 평가지수가 전분기의 40.0에서 31.9로 8.1p 큰 폭으로 하락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2009~2011 HRI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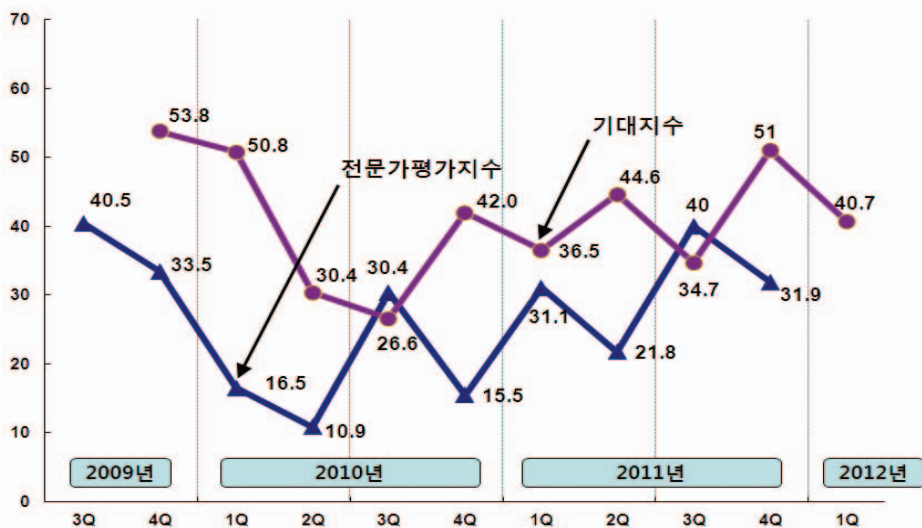
구 분	HRI 한반도 평화지수					기대지수
	전문가 평가지수	정량분석지수			교류지수	
'11-4분기	36.5 (▽2.5)	31.9 (▽8.1)	41.1 (▲3.1)	51.4 (▲3.9)	30.8 (▲2.3)	40.7 (▽10.3)
'11-3분기	39.0 (▲10.0)	40.0 (▲18.2)	38.0 (▲1.9)	47.5 (▲2.3)	28.5 (▲1.6)	51.0 (▲16.3)
'11-2분기	29.0 (▽7.2)	21.8 (▽9.3)	36.1 (▽5.2)	45.2 (▽2.8)	26.9 (▽7.7)	34.7 (▽9.9)
'11-1분기	36.2 (▲11.2)	31.1 (▲15.6)	41.3 (▲6.8)	48.0 (▲15.2)	34.6 (▽1.6)	44.6 (▲8.1)
'10-4분기	25.0 (▽5.1)	15.5 (▽14.9)	34.5 (▲4.7)	32.8 (▽2.1)	36.2 (▲11.6)	36.5 (▽5.5)
'10-3분기	30.1 (▲7.5)	30.4 (▲19.5)	29.8 (▽4.6)	34.9 (▲1.6)	24.6 (▽10.8)	42.0 (▲15.4)
'10-2분기	22.6 (▽7.3)	10.9 (▽5.6)	34.4 (▽8.9)	33.3 (▽9.5)	35.4 (▽8.4)	26.6 (▽3.8)
'10-1분기	29.9 (▽11.1)	16.5 (▽17.0)	43.3 (▽5.2)	42.8 (▽6.5)	43.8 (▽3.9)	30.4 (▽20.4)
'09-4분기	41.0	33.5	48.5	49.3	47.7	50.8

주 : ( )내는 지난 분기 대비 증감을 표시(p)

### 항목별 평가

전문가평가지수는 ‘협력·대립의 공존상태’의 진입단계에서 ‘긴장 고조’ 상태로 하락, 실적에 기초한 정량분석지수는 소폭 상승하였다. 전문가평가지수 (2011년 3분기 : 40.0 → 2011년 4분기 : 31.9)는 총 72명의 전문가를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의 남북 관계에 대한 평가는 지난 분기의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의 진입 수준에서 ‘긴장 고조’ 상태로 다시 악화되었다. 4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전기 대비 8.1p 하락한 31.9를 기록하면서, 연평도 도발 직후 수준으로 긴장이 다시 고조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남한의 연평도 도발 1주기 훈련에 대한 북한의 위협 및 6자회담 재개 불투명 등으로 인해 남북 관계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2년 1분기 기대지수는 전기 대비 10.3p 하락한 40.7을 기록함으로써, 전문가들의 2012년 1분기의 남북 관계 개선 기대감은 지난 분기에 비해 대폭 하락하였다. 이는 김 위원장 사망 이후 남한의 조문 제한 등으로 북한이 국방위원회의 대남 성명 및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현 정부와는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는 대남 강경 발언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2009~2011 전문가평가지수와 기대지수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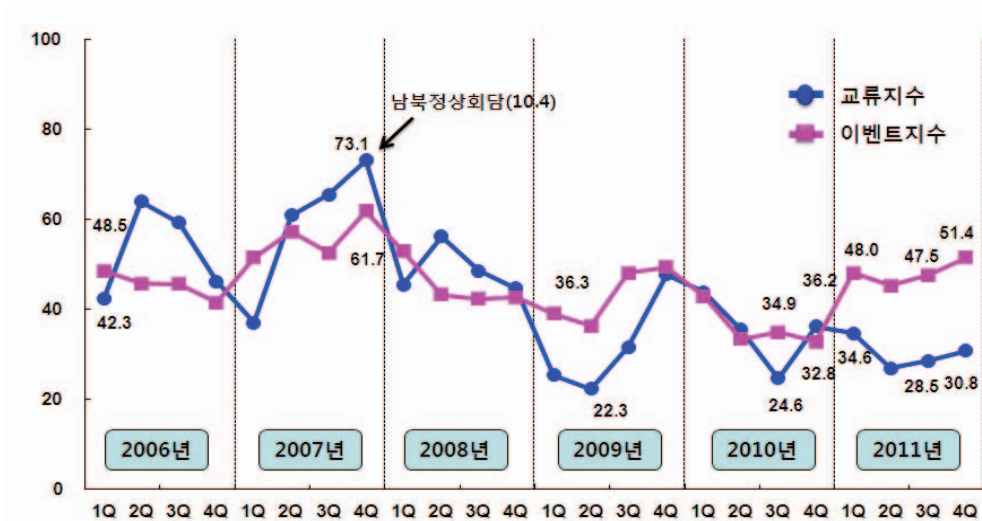


## HRI 한반도 평화 지수

4분기 정량분석지수(2011년 3분기 : 38.0 → 2011년 4분기 : 41.1)는 지난 분기의 38.0보다 3.1p 상승한 41.1을 기록함으로써, 남북 관계의 객관적 실적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량분석지수 상승은 정치·군사 부문의 ‘이벤트 지수’와 경제·사회·인도적 지원 부문의 ‘교류 지수’가 소폭 상승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벤트지수(2011년 3분기 : 47.5 → 2011년 4분기 : 51.4)는 남북 베이징 비핵화 실무회담, 2차 북미 회담 개최, WHO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계기로 3.9p 상승하였다. 하지만 금강산 재산권 외교적 조치 및 연평도 도발 1주년 관련 호국훈련에 상응한 북측의 위협으로 상승폭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교류지수(2011년 3분기 : 28.5 → 2011년 4분기 : 30.8)는 전기 대비 2.3p 소폭 상승한 30.8을 기록하였다. 교류지수의 소폭 상승은 개성 만월대 발굴 작업 재개 및 종교계를 비롯한 민간의 대북 밀가루 지원 등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5.24조치로 인한 민간의 남북교역 제한으로 남북교역액은 전분기 대비 1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2011 이벤트지수와 교류지수의 시계열 추이〉



주 : 이벤트지수는 정치·군사 분야의 변화를, 교류지수는 경제·사회·인도지원 분야의 변화를 표시

### 성향별 분석

성향 구분 없이 모든 전문가들은 지난 분기보다 남북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중도 및 진보 성향의 평가지수와 기대지수가 모두 보수 성향의 지수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유연성을 강조한 류우익 장관의 취임(9. 19)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진전이 없는 데 대한 실망감이 작용하였을 뿐 아니라, 김 위원장 사망에 대한 정부의 조문 제한과 북한의 반발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다음분기의 기대지수는 현재의 전문가 평가지수보다 여전히 높게 나타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향적인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성향별 전문가평가지수〉

구 분	보수 성향		중도 성향		진보 성향		전문가 평가지수	기대지수	HRI 평화지수
	현재	예상	현재	예상	현재	예상			
'11. 4분기	37.0 (▽2.5)	44.9 (▽5.7)	27.6 (▽12.3)	39.7 (▽12.0)	32.1 (▽5.2)	38.1 (▽12.3)	31.9 (▽8.1)	40.7 (▽10.3)	36.5 (▽2.5)
'11. 3분기	39.5 (▲11.5)	50.6 (▲11.2)	39.9 (▲23.1)	51.7 (▲23.4)	37.3 (▲14.6)	50.4 (▲13.8)	40.0 (▲18.2)	51.0 (▲16.3)	39.0 (▲10.0)
'11. 2분기	28.0 (▽1.9)	39.4 (▽4.2)	16.8 (▽16.2)	28.3 (▽18.8)	22.7 (▽3.5)	36.6 (▽0.7)	21.8 (▽9.3)	34.7 (▽9.9)	29.0 (▽7.2)
'11. 1분기	29.9 (▲15.5)	43.6 (▲11.3)	33.0 (▲8.8)	47.1 (▲5.6)	26.2 (▲15.8)	37.3 (▲2.0)	31.1 (▲15.6)	44.6 (▲8.1)	36.2 (▲11.2)
'10 4분기	14.4 (▽19.2)	32.3 (▽14.4)	24.2 (▽6.1)	41.5 (▲0.7)	10.4 (▽19.0)	35.3 (▽3.4)	15.5 (▽14.9)	36.5 (▽5.5)	25.0 (▽5.1)
'10 3분기	33.6 (▲20.6)	46.7 (▲15.7)	30.3 (▲20.8)	40.8 (▲18.4)	29.4 (▲18.6)	38.7 (▲9.3)	30.4 (▲19.5)	42.0 (▲15.4)	30.1 (▲7.5)
'10 2분기	13.0 (▽6.0)	31.0 (▽0.3)	9.5 (▽4.5)	22.4 (▽8.2)	10.8 (▽5.0)	29.4 (▲0.6)	10.9 (▽5.6)	26.6 (▽3.8)	22.6 (▽7.3)
'10. 1분기	19.0 (▽20.7)	31.3 (▽20.1)	15.0 (▽15.5)	30.6 (▽24.0)	15.8 (▽13.9)	28.8 (▽20.0)	16.5 (▽17.0)	30.4 (▽20.4)	29.9 (▽11.1)
'09. 4분기	39.7	51.4	30.5	54.6	29.7	46.8	33.5	50.8	41.0